


보 도 자 료		
	<b>보도일시</b>	2021년 <b>1월 15일</b> <b>조간</b> (1. 14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	<b>담당 부서</b>	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
	조현수 과장/ 장현정 서기관 044-201-6750 / 6751	
<b>배포일시</b>	2021. 1. 13. / 총 12매	

##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추진...환경건강 안전망 구축

- ◇ ‘안전한 환경, 모두가 건강한 사회’ 비전, 4개 전략 12개 주요 정책과제 추진으로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
- ◇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(2011~2020)에 따라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 마련

□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‘안전한 환경, 모두가 건강한 사회’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\*(2021~2030년)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.

\* ‘환경보건법’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환경보건정책의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

○ 이번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‘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·관리’에서 ‘피해 대응·복구’까지 확장했다.

□ 환경보건 정책은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(2011~2020)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, 환경책임보험·피해구제 도입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.

○ 특히,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·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전향적으로 규명했고, 피해구제를 확대했다.

\* [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자수] '17.8. 280명 → '20.12. 4,114명

[석면 피해인정자수] '17.12. 2,842명 → '20.12. 4,823명

[환경오염 취약지역 피해인정자수] '17.12. 81명 → '20.12. 171명

- 또한,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 확대,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, 조명 환경관리 구역 확대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.

\* [주택 슬레이트 철거] '17.12. 133,602동 → '20.12. 226,610동  
 [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] '17. PM<sub>10</sub> 150~200 → '20. PM<sub>2.5</sub> 50 $\mu$ g/m<sup>3</sup> 이하  
 [조명환경관리구역] '17. 3개 → '20. 5개 지자체

-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 인자의 △사전 감시 강화, △노출 관리 강화, △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, △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전략과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.

### < 전략①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>

-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-인자-지역단위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·감시할 계획이다.

-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대폭 확대하고,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'착용가능(웨어러블) 첨단 측정장비'를 활용할 계획이다. 신규 연구개발(R&D)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 영향과의 상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\*할 계획이다.

\* '27년까지 신규 연구개발 1,617억원 투입 계획(환경성질환 안심관리 기술 등 3개 사업)

- 미세먼지·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, 나노물질·미세플라스틱·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 영향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.

- 난개발·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,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\*를 작성하는 등 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·건강감시 또한 강화된다.

\* [난개발지역] (현재) 21개소 → ('24) 누적 100개소 건강영향조사·약식조사 실시

- 특히, 향후 도시·택지 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, 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.

## < 전략②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 강화 >

□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·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.

○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고,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한다. 또한,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.

○ 체감형 소음·진동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확대\*하고, 공사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제재를 하며,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 이동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.

\* [실시간 자동 측정망] (현재) 67개소 → ('22) 153개소 → ('23) 297개소

○ 한편, 빛공해 관리를 위해서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하고,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.

□ 화학물질 평가와 산업계 관리를 강화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.

○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고, 허가·제한·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 대상 현장 밀착형 1대1 상담(컨설팅)을 비롯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저가로 제공하는 등 화학물질 등록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.

□ 취약·민감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가 보다 확대된다.

○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 감시를 강화하고,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\*할 예정이다. 특히, 자연친화적인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침서(가이드라인) 배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.

\* [납 600 → 90ppm / [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 기준 신설(총 함유량 0.1% 이하) 등

- 여성·노인 등을 위해서는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하며,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·진단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.
- 기타 저소득층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환경 상담(컨설팅)·개선 사업도 확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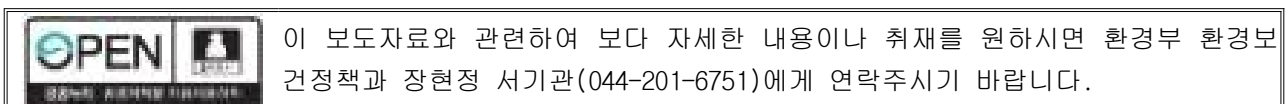
### < 전략③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>

- 통합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.
  - 피해자에게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위해, 기존에 가습기살균제·석면·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의 기능을 통합·강화하여, 가칭 '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(핫라인)'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.
-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된다.
  - 가습기살균제·석면·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, 의료·사후관리 등 피해자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.
  - 보다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피해규모·심각성·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우선 구제를 실시하고, 선제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.
  -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친환경재생사업 대표 사례\*를 만들고,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.
    - \* [친환경 재생사업계획 수립 지역수] (현재) 1개 → ('25) 3개 → ('30) 5개
  -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시 보험적용을 강화하는 한편, 손해사정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 책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한다.

## < 전략④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>

-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된다.
  - '환경보건법' 개정(2020년 12월)으로 지자체 건강영향조사·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. 이에 지자체별로 환경보건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고, 환경보건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.
    - \* [환경보건 조례 수립 지자체수] (현재) 3개 → ('25) 8개 → ('30) 14개
  -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역 환경보건계획 시범사업이 추진되며,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도 지정·운영된다.
- 끝으로,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.
  -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·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,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강화(연구형→정책지원형)된다.
  - 또한, 전문가·민간·일반인도 환경보건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구축·공개할 계획이다.
-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“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한 계획”이라며,
  - “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, 민감·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'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' 주요 인포그래픽.  
2. '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' 요약본. 끝.



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('21~'30)



안전한 환경,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 
환경부가 노력하겠습니다.

4대 전략 12개 주요 정책과제



01 “더 꼼꼼하게” 환경유해인자를 감시하겠습니다.

- Q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강화
- Q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·관리 도입  
- 웨어러블 측정기기 등 활용한 수동계 중심 노출 평가
- Q 신규 유해인자·기후변화 모니터링 강화  
-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취약지도 구축  
- 나노물질, 미세플라스틱, 환경유해 마생물 건강위해 모니터링



- Q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강화  
- 조사대상물질 확대, 생체시료 분석방법 개선, 정책 활용도 제고
- Q 전생애 건강영향감시 코호트, 패넬조사 강화
- Q 환경오염취약지역 사전평가 및 등급별 관리  
- 빅데이터 활용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지도 작성, 취약지역 지속 모니터링
- Q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시 건강영향평가 대상 확대  
- 도시·택지개발사업, 소규모산업단지, 도시·군기본계획 등

02 “더 체감할 수 있는”  
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

실내공기

- 다중이용시설별 맞춤형 관리
- 산속 공동주택공기질 권고기준 강화
- 라돈 고농도 지역·시설 집중 관리 강화

빛공해

- 옥외조명사전 심사제도 보급
- 민원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

소음

-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 확대
- 도시설계에서부터 쾌적한 음환경 조성

화학물질

- 화학물질 등록·평가·유통관리 강화

유해인자 노출 감소  
체감형 서비스 강화

어린이·여성·노인  
환경보건서비스 확대

취약계층  
실내주거환경진단·컨설팅 지원

실내공기질 측정 장비대여 등 신규 서비스 발굴



03 환경 피해 발생 시,  
“더 신속하고, 효과적으로”  
대응하겠습니다.



ONE-STOP  
환경오염 피해  
대응 시스템

- > 피해구제대상 확대
- > 합리적수준의 지원금 지급 및 의료서비스·사후관리 프로그램 제공
- > 오염지역 환경복구·재생 지원

소극적  
피해 구제



기 존

개 선



04

“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 ”

01

지역중심 환경보건정책

- > 지역형 환경보건서비스 확대
- > 지자체 협력 강화

02

환경보건 전문성 강화

- > 환경보건 전문가관 설립
- > 국제네트워크 확대

03

조사·연구결과 활용 확대

- > 환경보건 빅데이터 분석·공개
- > 「환경보건통계연보」 발간

04

환경보건 교육·홍보

- > 전국민 교육·홍보 확대
- > 환경보건 전문가 양성 기관 신설

[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·예방 체계 ]



**더 꼼꼼한 감시·더 투명한 공개**

**더 안전하게, 환경유해인자 노출 제거**

**더 신속한 피해구제·복구**

	조사·감시	결과공개	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제공	원스톱 피해 대응 체계 운영
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전략1]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개선 (1.1)</li> <li>[전략1] 전생애 건강영향감시 코호트·패널조사 (1.2)</li> <li>[전략1] IoT 기술 기반 환경보건 감시 (1.4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전략4] 환경보건빅데이터 구축·분석·공개 (2.2~3)</li> <li>[전략4] 환경보건지표 운용 (2.1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전략2] 노인 주거·활동공간 개선사업 확대 (3.1)</li> <li>[전략2] 어린이 생활환경 안전관리 강화 (3.2)</li> <li>[전략2]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(3.3)</li> </ul>	
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전략1] 생활환경위해요소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(1.3)</li> <li>[전략1] 생활화학제품 시장 감시 (1.5)</li> <li>[전략1] 기후변화·신규유해인자 모니터링 및 대응 (2.1~5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전략4] 「환경보건 통계 연보」 발간 (2.2)</li> <li>[전략2] 여성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 정보 제공 (3.1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전략2] 위해성 기반 생활환경 위해요소 관리 (1.1~6)</li> <li>[전략2]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(2.1~5)</li> <li>[전략2] 수용체 관점 환경기준정책 수립 및 평가 (1.7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전략3] 원스톱 환경오염피해 대응 및 시스템 구축 (1.1~3)</li> <li>[전략3] 환경오염피해 구제 확대 및 지원 강화 (2.1~4)</li> </ul>
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전략1]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(1.6)</li> <li>[전략1] 사전 건강영향평가 확대 및 고도화 (3.1~2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전략1]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 구축·공개 (1.6)</li> <li>[전략1]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취약지도 구축 (2.1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전략4] '환경건강도시' 시범 운영 (1.3)</li> <li>[전략4] 지역별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(1.3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전략3]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개선 체계 구축 (2.5)</li> </ul>

**환경보건 전문 기반 구축**

지역중심 환경보건정책	환경보건 전문성제고	환경보건 교육·홍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전략4] 지자체 환경보건정책제도적 기반 마련 (1.1)</li> <li>[전략4] 지자체 환경보건정책 추진 역량 강화 (1.2)</li> <li>[전략4] 환경보건센터 기능 강화 (3.2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전략4] 환경보건 전문기관 설립 추진 (3.1)</li> <li>[전략4] 환경보건 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 (3.3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[전략4] 전국민 생애주기별 환경보건 교육 (4.1)</li> <li>[전략2] 건강나누리캠프, 어린이 환경보건 체험관 운영 (3.1)</li> <li>[전략4] 환경보건 전문가 양성 (4.2)</li> </ul>

## I. 추진 배경 및 경과

□ (배경)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\*('11~'20) 기간 종료에 따라 장래 환경보건정책을 위한 제2차 종합계획('21~'30) 수립 필요

\* 「환경보건법」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건정책 분야의 국가 기본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(법 제6조 제1항)

□ (경과)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초안 작성('20.1.~9), 공청회('20.10), 관계기관 협의('20.10~11), 환경보건위원회 의결('20.12.15)

## II. 비전 및 목표

비전

“ 안전한 환경, 모두가 건강한 사회 ”

Safe Environment, Healthy People

목표

환경보건안전망 구축을 통한 환경성 질병부담 완화

원칙



전략

환경 유해인자 사전 감시 강화

환경 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

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

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

### 중전 계획과의 비교

- ① 환경유해인자 예방·관리 중심 → 피해 대응·복구까지 확장한 지역사회환경 종합적 예방·관리
- ② 공급자 위주의 환경유해인자 조사·연구 → 수요자 중심의 환경보건서비스 강화
- ③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→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자체 협력 강화



## V. 핵심전략별 추진 과제

### 전략1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

현 재 (As-Is)	개 선 (To-Be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별 환경유해인자 분산 조사·감시</li> <li>빛공해·소음 등 환경민원 요소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미비</li> <li>환경 유해인자 문제 발생 이후 사후적 대응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물질-사람-지역의 전방위적 조사·감시</li> <li>주민 불편요소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화</li> <li>환경 유해인자 사전예방적 대응 강화</li> </ul>

#### 1 전방위적 환경보건 조사·감시 체계 구축

- (사람)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강화, 전생애 건강영향감시 코호트 및 패널조사 수행, 웨어러블 측정기기를 활용한 수용체 중심의 노출평가 추진
- (지역) 난개발·교통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확대,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지도 작성 등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
- (인자) 미세먼지·소음 등 생활환경유해인자 측정망 고도화 건강영향조사 체계 강화, IoT 기반 주요 유해인자 감시시스템 구축,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

#### 2 잠재적 유해인자 대비 체계 마련







- (기후변화) 기후변화로 인한 오염물질 거동 및 건강영향 예측, 건강영향 취약지도 구축,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관련 대책의 건강편익 평가
- (신규 유해인자) 신규 유해인자 환경보건 이슈 사전 예측\* 및 대응 체계 마련, 환경유해 미생물·나노물질·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 기반 구축

\* [기존] 이슈 발생 후 유·위해성검토 → [개선] 전문가 통한 이슈 사전 예측·검토

#### 3 사전 건강영향평가 제도 고도화

- (대상사업 확대) 도시·택지 개발사업, 소규모 산단 등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, 건강영향평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
- (방법론 고도화) 대상사업별 특성 반영한 건강영향평가 방법론 개발, 누적 위해성평가 도입, 사후 관리로 건강영향평가 환류 체계 구축

## 전략2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

현 재 (As-Is)	개 선 (To-Be)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 민원 대응 위주의 환경유해인자 관리</li> <li> 유해화학물질 지정·관리 사각지대 존재</li> <li> 공급자 위주의 시혜적·단편적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</li> </ul>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 건강위해성 기반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확대</li> <li> 유해화학물질 평가·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</li> <li> 국민체감형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</li> </ul>

### 1 생활환경 불편·위해요소 적극 관리

- (실내공기) 다중이용시설별 법적 관리 수준 차등화,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권고기준 강화, 신규 제작 대중교통차량 내 VOCs 등 권고기준 마련 등
- (소음·진동) 환경소음 실시간 측정체계 구축, 공사장 규모별 차등 제재, 이동소음규제지역 지정 확대, 쾌적한 음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설계 방안 마련 등
- (빛공해)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확대, 스마트 조명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빛공해 관리 기술 개발, 조명용도·지역특성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
- (매체통합관리 체계) 매체별 환경보건협의체 운영, 주요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정보 분석·제공, 저감시 건강편익 산출 등 매체별 정책지원 강화

### 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

- (화학물질 평가·관리 강화) 등록된 모든 화학물질 위해성 심사 및 평가, 허가제한 금지물질 지정 및 관리 체계 개선, 화학물질 유통 사후관리 강화 등
- (산업계 자율관리 강화) 화학물질별 Use Map 통한 산업계 노출 관리 지원, 화학안전산업계 지원단 운영 등

### 3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

- (어린이·청소년)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강화,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, 자연친화적 공간·프로그램 확대(국립공원 연계 등)
- (여성·노인)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, 주거공간 환경유해인자 측정·진단 서비스 확대, 폭염·미세먼지 등 실시간 정보 제공 등
- (환경보건 취약계층) 실내환경 컨설팅·개선 지원, 환경보건 바우처 서비스 도입 등

## 전략3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



### 1 원스톱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 구축

- (초기 대응 체계 구축) 환경건강피해 영향 조사 방법론 및 피해범위 예측 모델 개발, 피해양상별 위기관리 매뉴얼 및 경보시스템 개발 등  
-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국민 환경건강우려 신고 체계 구축 등
- (건강피해 사후관리 강화) 환경사고·질환별 사후 모니터링 지표 개발, 피해 지역 주민 코호트 운영, 원스톱 역학조사·분쟁조정·피해구제 체계 구축\* 등  
\*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환경오염 피해구제 관련 전담 부서 기능을 확대·강화
- (위기소통 강화) 이슈 발생 후 환경보건 위해소통 매뉴얼 마련, 피해 직후 전과정 정보 공개, 환경보건 핫라인(가칭) 운영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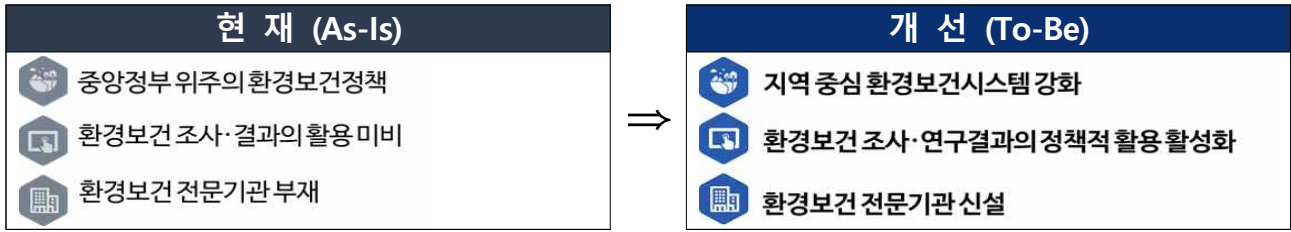
### 2 환경보건 피해구제 확대

- (피해구제 제도 정비) 피해 규모·심각성·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우선 구제 실시, 구제 필요지역 선제적 발굴 및 피해구제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등
- (지원내용 확대) 가습기살균제피해·석면피해·환경오염피해 구제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 지급 및 의료서비스·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제공
- (책임보험 공공성 강화) 보험가입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의무화, 환경오염사고 피해시 보험 적용 강화, 손해 사정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 추진

### 3 환경오염 취약지역 개선 체계 구축

- (친환경적 복구·재생 모델 마련) 난개발 지역의 친환경재생 시범 사업 추진 및 관련 제도 정비, '환경오염 피해 재정비 재원' 마련 추진  
- 전국 난개발 지역 건강영향조사에 따른 '건강우려지역'을 대상으로 친환경 재생사업 확대 추진

## 전략4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



### 1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

- (제도적 기반 구축) 지자체 건강영향조사·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, 지자체별 환경보건 표준 조례 및 환경보건계획 수립 추진
- (지자체 역량 강화) 지자체 ‘환경보건 지원 센터’ 운영,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·운영, 보건소·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협력체계 구축 등
  - \* 지자체 관계자 업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, 관계기관 협의 추진
- (지역형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) ‘우리동네 환경건강문제 해결방안 공모를 통한 ‘환경건강도시’ 시범운영 및 국민 참여형 서비스 제공

### 2 환경보건 조사·연구 결과 활용 활성화

- (환경보건지표 개선) 지역단위 환경보건평가 등 지자체 활용 강화 (통합 환경보건지표 신설 등), 환경보건 지표 평가주기·방법 등 정비 등
- (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·공개) 환경유해인자 측정망, 지역별 건강정보 등 빅데이터 수집·공개(환경보건통계 연보 발간 등) 등 활용 도모

### 3 환경보건 조직 역량 및 전문성 강화

- (조직 강화)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·연구 및 서비스에 대한 전담기관 설립 추진, 환경보건센터 기능 강화(연구형→정책지원형), 전문위원회\* 신설
  - \* 환경보건 R&D 방향, 건강영향조사 방법론, 신규 환경유해인자 등 검토·자문
- (전문성 강화) 생애 주기별 표준 환경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,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·운영, 환경보건이슈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 등